



에너지 세제개편에 바란다

1. 첫머리에

금

년 2월까지만해도 DUBAI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10달러 수준에서 맴돌던 국제원유가가 금년말에는 배럴당 25달러 수준에 육박하면서 IMF 경제위기를 갓 벗어나 본격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유가예측기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고유가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18~2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을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에너지가격체계 재정립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여건에서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문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해야 하며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어 치밀한 분석을 거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에너지원별 가격구조의 변화는 국가경제 및 국민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존 가격구조에 맞추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비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업계에는 외화를 가장 적게 들여 이를 공급하는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원별로 국내에 기투자되어 있는 에너지 공급관련 시설투자 현황을 비롯하여 최종소비자 단계까지의 제반 유통관련 현황에 대한 현상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믹스를 이끌어 내려면 에너지원간 또는 유종간에 세금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방식은 매우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 명 환

< LG-Caltex정유 상무 >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계에는 외화를 가장 적

게 들여 이를 공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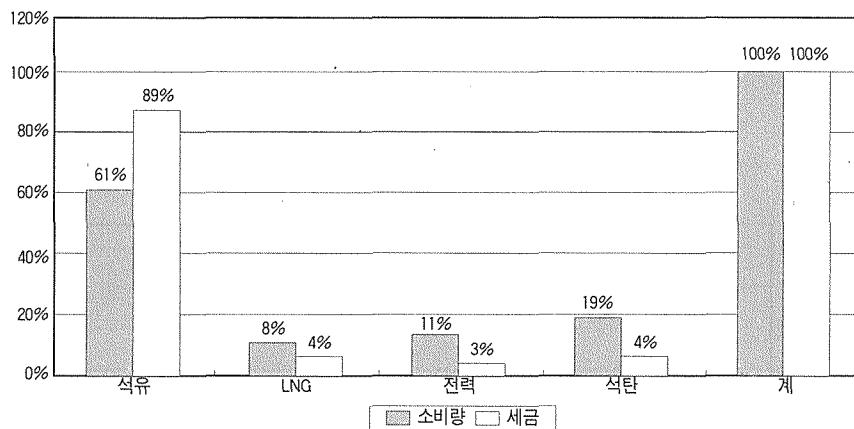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필자는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3가지 사항은 새로운 에너지세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1〉 에너지원별 소비 및 세금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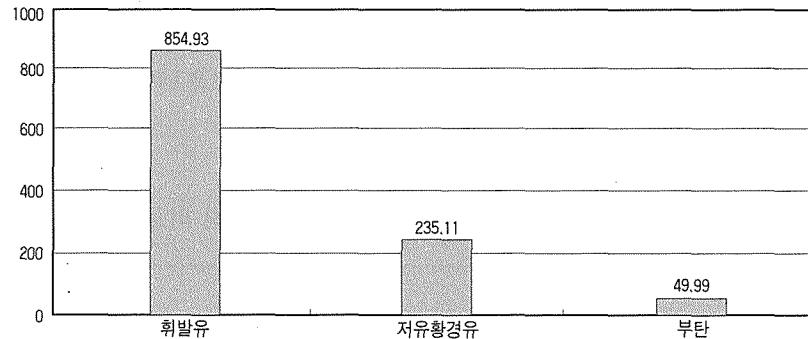
첫째는 에너지원간에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세금은 석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부과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1%인데 비해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 에너지세금의 89%나 된다. 석유는 소비량의 1.5배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기준으로 가스는 0.5배, 전력은 0.3배의 세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에너지 세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결과이다. 그 당시에는 다른 에너지 산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고 국가에서 전체 에너지산업을 관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가스산업이나 전력산업 등 석유 이외의 에너지산업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목하 이들 산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정부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원 간의 세금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평성이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적 에너지믹스를 도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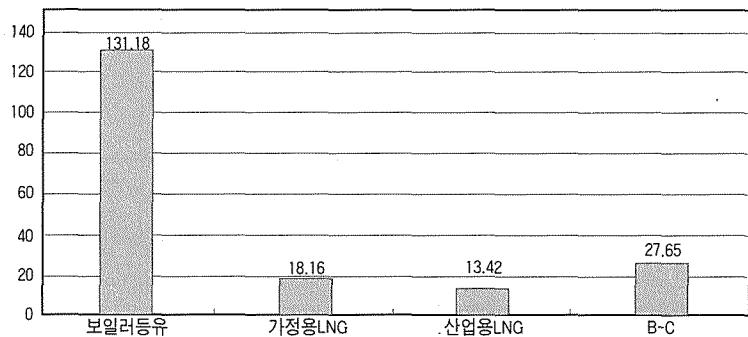
둘째는 에너지 대체재 간의 세금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에너지원간에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다
둘째는 에너지 대체
재간의 세금의 형평성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2〉 차량용·연료별 세금 비교



〈그림3〉 난방용 연료별 세금 비교



무엇보다도 대체재간 세금의 불공평성이 끼치는 심각한 부작용은 일부 유통단계의 시장참여자 및 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 세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끝없는 탈세의 유혹을 만연시킨다는 점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세금구조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면서도 특정제품에 세금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부과되고 있다. 이는 현행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정해졌다기 보다는 물가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위한 주요 보조수단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경제여건이 이미 달라져 있고 향후는 더 급속도로 변화될 것이다. 상황과 동떨어진 에너지 세금구조는 그 만큼 비경제적인 에너지 소비행태를 야기시키고 있고 유형 무형의 국가적인 비경제를 초래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체재간 세금의 불공평성이 끼치는 심각한 부작용은 일부 유통단계의 시장참여자 및 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 세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끝없는 탈세의 유혹을 만연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 때때로 사회문화화 되어 보도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탈세 사건은 그 근본원인이 이러한 대체재간의 불공평한 세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이러한 대체재간에 왜곡된 세금 체계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혹자는 대체재간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할 경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계층

별 업종별 차별가격 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감안해 보면 그 답이 자명해진다. 과거 여건하에서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격보다는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산 정보 기술과 사회적인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상기 정책은 재정 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인해 그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사전에 예고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세제의 변경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강요하게 된다. 크게는 거대한 공장의 건설이나 폐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에서부터 작게는 최종소비자의 차량이나 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기구의 구입이나 개체 등의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에너지세제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고제를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예고제는 시장참여자들이 무리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에너지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현재의 시설을 개체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3. 맺음말

무릇 세금은 공평해야 하고 또 단순명료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에너지업계의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에너지믹스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에너지업계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대외개방 및 공기업민영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국경없는 경쟁의 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환경라운드의 전개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의 등장 가능성과 국제적인 자원 독점현상 심화로 국제 에너지시장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방화와 자유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에너지믹스를 유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무릇 세금은 공평해야
하고 또 단순명료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
에서 새로운 에너지세
제는 에너지업계의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